

勞 動 經 濟 論 集
 第30卷(3), 2007. 12, pp. 77~102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불평등도 지표로서의 소득과 소비의 비교*

김 대 일**

본 연구는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소득과 소비라는 두 변수의 적합성을 비교한다. 일반적으로 불평등도 측정에는 소득이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득보다는 소비가 경제 주체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따라서 항상소득가설이 적용되는 경제라면, 복지의 불평등도 측정에 있어서는 소비의 불평등도가 보다 더 적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득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와 실질적인 복지의 불평등도의 괴리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가계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패턴을 비교한 결과, 항상소득가설이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와 소득의 불평등도를 비교한 결과 소비의 불평등도가 훨씬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소비와 소득의 불평등도 지표가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얻어졌다. 따라서 향후 불평등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소비의 불평등도가 강조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불평등도, 항상소득가설, 소득, 소비

I. 서 론

불평등도(inequality), 또는 형평성(equity)이라는 주제는 경제학에 있어서 효율성

* 본 연구에 많은 논평을 주신 이창용 교수와 유경준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주례 세미나 참가자, 그리고 익명의 두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남은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dikim@snu.ac.kr)

(efficiency) 및 성장(growth) 등과 더불어 가장 주목받는 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 성장기 직후 경제위기를 겪으며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고, 그 효과의 하나로서 경제위기 이후의 불평등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불평등도에 대한 분석도 매우 활발한 편이다. 유경준·김대일(2003)과 같은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 빈곤율이 상당한 수준일 뿐 아니라,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신동균·전병유(2005) 등에서는 소득 불평등도가 확대됨과 동시에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불평등도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소득이 실제 불평등도 분석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피고, 소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소비의 불평등도 분석의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구성원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변수는 소득이라기보다 소비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소비는 소득뿐 아니라, 자산과 미래의 소득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소득에 비해 경제 구성원의 복지에 연계되는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 단계에서는 소비보다 소득에 대한 연구가 더 일반적이다.¹⁾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소비에 대한 자료보다는 소득에 대한 자료가 더 광범위하다는 것인데, 실제 소비와 소득 간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존재한다면 소득 분포에 대한 분석으로도 얼마든지 복지 분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에 초점을 둔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소득에 관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소득과 소비 간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존재하는지, 또는 그러한 관계가 존재하여도 그 연계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소비와 소득의 불평등도를 비교한 선행연구에서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Curtler and Katz(1992)에서는 미국 가구에 있어서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도가 유사한 양상을 보여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Krueger and Perri(2006)에서는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도가 반드시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실제 그러한 일대일 대응관계가 강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대표적으로 항상소득가설을 고려할 수 있다. 항상소득가설은 기본적으로 위험 기피적인 경제 주체가 자본시장을 통해 소득 변동성을 중화(neutralize)시키고 소비 균등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소득의 변동성이 높고,

1) 예외적인 국내 연구로는 소비지출의 불평등도를 분석한 여유진(2002), 유경준·김대일(2003)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소비자 금융이 발달하여 있을수록 소득과 소비의 괴리가 유발될 수 있으며,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 및 소득의 분포만으로 경제 구성원의 복지(welfare)를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구별 소득과 소비의 양상을 비교하여 소비의 결정요인으로서 향상소득가설의 적합성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소득과 소비를 기준으로 추정된 불평등도 관련 지표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최근 소득 분포의 불평등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 분배성향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불평등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최근 유경준·김대일(2003), Kim(2006) 등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소득의 일시적 변동성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소비자 금융의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 최근의 소득 불평등도의 변화가 얼마나 소비 불평등도의 변화로 연계되어 실질적인 복지 불평등도로 연계되는지 가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소비의 불평등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소득 불평등도의 학문적·현실적 의미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의 불평등도는 특히 근로소득의 불평등도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따라서 소득의 불평등도는 노동시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임금, 또는 인적자본 서비스에 대한 가격과 인적자본의 분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비록 소비의 불평등도와 일대일 대응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하여도, 전반적인 불평등도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소득 자료는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것은, 소득의 불평등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소득이 갖는 경제적인 의미에 다소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 구성원의 복지 분포에 대한 시사점을 보다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소비의 불평등도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소비와 소득의 불평등도에 차이를 보일 때, 차이의 원인이 무엇이고, 경제 변화의 어떠한 부분을 반영하여 그 차이가 유발, 또는 확대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 결정에 있어서 향상소득가설의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와 소득의 연계에 있어서, 소비를 기준으로 한 소득의 분포가 소비와 거의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강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소득보다는 소비의 불평등도 지표가 더 항상적인 복지 불평등도를 더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소비와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도 지표는 그 수준뿐 아니라 시계열 변화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도의 수준 및 변화뿐 아니라 소비의 불평등도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II. 소득, 소비와 항상소득가설의 적합성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과 소비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수록하고 있는 서베이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과 소비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은 중요한 이점이다. 본장에서는 이미 언급한 방향대로 우리나라에서 항상소득가설의 적합성을 간략하게 분석하고, 소비와 소득으로 정의된 불평등 지표를 비교하고자 한다.

1. 소득과 소비의 비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2001~2004년 기간에 걸친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이다.²⁾ 도시가계조사에서는 가구 유형을 크게 임금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 그리고 무직자 가구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는데, 임금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소득과 소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유형의 가구에 대해서는 소비에 대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자료로서 2001년도에 발표된 가구소비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는 모든 유형의 가구에 대해 소득과 소비 자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년 실시되는 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최근 결과를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비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분석 범위를 임금 근로자에 국한시키고 있으며, 소비 분포의 양상을 분석할 때에는 모든 가구를 포함시키고 있다.³⁾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1인 가구를 제외한 2인 이상 가구만 포함된 자료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불평등도 지수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은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

<표 1>은 도시가계조사의 임금 근로자 가구에서 실질 소득과 실질 소비의 분포를 간략하게 비교하고 있다.⁴⁾ 본 연구에서 소비는 가구의 지출(expenditure)로 정의된다. 물론 보다 정확하게는 가구 지출이 아니라 소비(consumption)가 측정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료에서 내구재 등에 대한 지출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흡하나마 가구의 지출로 정의하였다.⁵⁾ 가구소득의 경우 로그 값으로 2001~2004년 기간 동안 다소의 등락을 보이는데, 이는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도시가계조사에 포함된 표본 가구가 교체되면서 발생하는 차이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로그 소득의 표준 편차도 2002년 이전과 이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표본 교체와 일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자체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기는 힘들지만, 아래에 소비와 비교할 경우 상당히 다른 양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표본 교체의 효과로만 보기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로그 소득의 분포 변화에 있어서 표준 편차와 백분위 격차(percentile difference) 간에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흥미롭다. 일례로 2001년과 2002년 기간 동안 소득의 표준 편차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50/10 백분위 격차와 90/50 백분위 격차는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2003년과 2004년 기간 동안에는 표준 편차는 감소하였는데 50/10 백분위 격차는 오히려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 분포에 있어서 90 백분위 이상과 10 백분위 이하에서 상당히 다른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2001~2002년 기간에는 로그 소득 분포의 양쪽 꼬리(both tails)에서 오히려 분포는 일부 개선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가구 소비의 경우 소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일단 평균 실질 소비가 소득에 비해 낮은 점은 가구의 저축 성향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표준 편차로 측정된 분포는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소득의 경우 2002년 이전과 2003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변화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표준 편차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비에 있어서는 거의 그러한 차이가 관측되지 않기 때문이다. 2002년 이전과 2003년 이후 소득의 표준 편차의 격차가 단순히 표본 교체의 문제라

3) 2001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한 연구 결과는 유경준·김대일(2003)에서 일부 제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연구가 도시가계조사를 통해 결과를 재확인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4) 2000년도 가격 기준.

5) 일례로 100만 원에 해당하는 내구재를 구입하였다면, 가구지출은 100만 원을 포함하지만, 소비(consumption)는 그 내구재로부터의 서비스(service flow)를 포함한다. 따라서 그 내구재의 수명이 10년이라면 소비는 10만 원만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구재 지출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내구재의 평균 수명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지출을 사용하기로 한다.

〈표 1〉 실질 소득과 소비의 기초통계

	로그 가구 실질소득			
	평균	표준 편차	50/10 격차	90/50 격차
2001	14.572	.554	.678	.651
2002	14.614	.555	.711	.676
2003	14.583	.747	.753	.665
2004	14.607	.717	.778	.650
	로그 가구 실질소비			
	평균	표준편차	50/10격차	90/50격차
2001	14.352	.499	.619	.642
2002	14.368	.506	.637	.649
2003	14.377	.504	.638	.615
2004	14.408	.511	.635	.627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2001~2004)』.

면 소비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관측되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후에 언급될 소득의 일시적 변동성(volatility in transitory income)의 증가와 일부 연계되어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포의 불평등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소비는 소득에 비해 훨씬 균등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의 표준 편차는 2002년 이전 기간 동안 소득에 비해 .05 로그 포인트 낮으며, 2003년 이후에는 .20 포인트 이상 낮음을 알 수 있다. 50/10 백분위 격차의 경우에는 소득의 경우 계속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 비해 소비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2004년에는 .14 로그 포인트로까지 그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90/50 백분위 격차의 경우에도 소비에서의 격차가 소득에 비해 뚜렷하게 작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2>에서는 가구 소득이 아닌 가구원 1인당 표준화된 소득과 소비를 사용하여 기초 통계치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가구 소득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준화된 1인당 소득(소비)은 가구 소득(소비)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OECD와 World Bank 등에서 자주 활용되는 지표이다. 가구 소득, 또는 소비를 가구원 수가 아니라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이유는 가구원이 공통으로 소비하는 재화(대부분의 내구재가 이에 해당)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구원 1인당 실질적인 소비는 단순히 가구원 수로 나눈 소비나 소득보다 높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구한 ‘표준화된 1인당 소비’의 경우 가구 소비와 마찬가지로 그 표준 편차가 소득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값을 보이고 있고, 50/10 백분위 및 90/50 백분위 격차도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비는 매우 안정적인 표준 편차를 보이고 있어 소득과 잘 대비되고 있다.

〈표 2〉 표준화된 가구원 1인당 로그 실질소득과 소비

	표준화된 1인당 로그 실질소득			
	평균	표준편차	50/10격차	90/50격차
2001	13.981	.537	.624	.670
2002	14.028	.533	.647	.674
2003	13.986	.717	.701	.644
2004	14.018	.686	.730	.651
	표준화된 1인당 로그 실질소비			
	평균	표준편차	50/10격차	90/50격차
2001	13.760	.470	.540	.635
2002	13.782	.478	.567	.621
2003	13.780	.472	.582	.591
2004	13.819	.476	.581	.609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2001~2004)』.

이러한 결과는 경제 내 불평등도를 측정함에 있어, 어떠한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 즉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표준 편차를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 이외에, 소득과 소비 가운데 어떤 것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가구별로 소득과 소비가 거의 일대일 대응관계에 있다고 할 경우, 어느 변수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앞서 본 표의 결과는 실제 이 두 변수가 일대일 대응관계에 있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그 가운데 하나인 항상소득가설에 무게를 두어 분석하기로 한다.

2. 항상소득가설의 적합성

Friedman(1957)의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각 위험 기피적인 효용함수를 갖는 가구 또는 개인은 소득이 변동적일 경우 자본시장에서 저축(saving)과 대출(loan)을 통해 자신의 소비를 균등화(consumption smoothing)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변동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얼마나 소비를 균등화시킬 수 있는가는 자본시장에의 접근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일례로 개인의 신용카드나, 최근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소비자 금융은 과거에 비해 가구 또는 개인 소비의 균등화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항상소득가설의 반대편에는 가구 또는 개인의 소비가 자신이 보유한 자산 및 각

시점에서의 소득을 상회할 수 없다는, 이른바 cash-in-advance 모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제약적이기 때문에 소비가 소득을 상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어떤 경제에서 항상 소득 가설이 성립되고 있는지, 아니면 cash-in-advance 유형의 소비가 지배적인지는, 일차적으로 소득 이상의 소비를 하는 가구의 빈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다음 <표 3>은 우리나라 도시(임금)근로자 가구에서 소비가 소득을 상회하는 가구의 비중을 2000년대 초반 도시가계조사를 통해 추정한 결과이다. 도시가계조사는 특정 가구가 연간 최대 12회(매월) 관측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시가계조사에 포함된 가구별로 연간 월평균 소득과 소비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월평균 소비가 소득을 상회하는 가구의 비중이 매년 18~22% 수준을 보이고 있어, 도시 임금 근로자 가구에 있어서는 다섯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소비가 소득을 능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연간 자료를 사용한 월평균 소득과 소비이므로, 이와 같이 상당한 비중의 가구에서 소비가 소득을 상회한다는 점은 소비 균등화가 유발되는 기간(interval)이 1년을 넘는 기간, 즉 상대적으로 장기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자본시장을 통한 소비 균등화가 단기적인 소득 변동성, 즉 월별 소득의 변동성을 제거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넘는 기간의 소득 변동성도 어느 정도까지는 소비의 균등화로 연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와 같이 소비가 소득을 상회하는 가구에 있어서 평균 소비 액수와 평균 소득 액수의 비율이 1.23~1.29 수준을 보이고 있어, 평균적으로 소비가 소득의 25% 이상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의 변동성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자본시장에서의 저축과 대출을 통해 대응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분석에 사용된 가구들 가운데 남성이 가구주인 경우 소비가 소득을 상회하는 비중이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에 비해 다소 낮고, 평균 소비/소득 배율도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에서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가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에 비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가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에 비해 일시적으로 음의 소득충격(negative income shock)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표 4>에서는 소비가 소득을 상회하는 가구의 비중을 가구주의 성별과 연령대 별로 나누어 비교하고 있는데, 그 비중은 대체로 가구주의 연령과 연계되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역-U자 형태를 보인다.⁶⁾ 이와 같이 가구주 연령과 소비가 소득을 상회

6) 다만 예외적으로 60세 이상 여성 가구주 가구에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들

<표 3> 소비가 소득을 능가하는 가구의 비중(임금 근로자 가구)

		2001	2002	2003	2004	2001~04
비중 평균 배율		21.0% 1.24	18.4% 1.29	19.5% 1.23	21.5% 1.26	20.1% 1.25
남성 가구주	비중 평균배율	19.6% 1.23	16.6% 1.28	17.8% 1.23	20.0% 1.25	18.5% 1.25
여성 가구주	비중 평균배율	27.2% 1.30	25.8% 1.32	28.0% 1.24	28.8% 1.30	27.4% 1.29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2001~2004)』.

<표 4> 소비가 소득을 상회하는 비중(가구주 연령대별, 2001~04년 총괄)

(단위 : %)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가구	18.6	21.0	21.7	21.1	23.2
남성 가구주	17.3	18.7	20.7	20.5	18.1
여성 가구주	25.7	30.9	25.4	23.1	42.6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2001~2004)』.

하는 비중이 역-U자 관계를 갖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소비의 유형별로 균등화(smoothing)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경준·김대일(2003)에서는 균등화에 예외적인 소비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교육비 이외에도 자녀에 대해 지출되는 소비는 가구주의 연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가구의 생애(life-cycle)에 걸쳐 균등화될 수 있는 일반 소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자녀에 대한 지출이 높은 30~50대 연령층에서 소비가 소득을 상회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양상이 <표 4>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판단된다.⁷⁾

소비가 소득을 상회하는 가구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결과는, 이 결과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인 임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도출된 것이기에, 항상소득가설이 성립되

가구가 대체로 남성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가구라는 점에서 가구소득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7) 익명의 논평자는 소비가 소득을 상회하는 가구의 비중이 중년층에서 높은 양상(연령별 역 U-자 형태)을 유동성 제약의 연령별 격차로 해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유동성 제약의 연령별 격차가 이러한 양상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유경준·김대일(2003)에서는 교육비 등의 지출을 제외할 경우 소비의 연령별 양상이 크게 완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어, 자녀에 대한 지출이 균등화(smoothing)될 수 없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해석된다.

고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임금 근로자 가구는 자영업자 가구에 비해 연간 소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구임에도 소득 이상의 지출을 하는 가구가 많다는 것은 소비 균등화 효과가 비단 단기적인 소득 변동에 대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른 소득 변화와 같이 장기에 걸친 소득 변동성에 대해서도 소비 균등화가 유발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에 대한 항상소득가설의 적용도를 좀더 관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고려할 수 있다.

$$\log y_{it} = \log y_{it}^P + \epsilon_{it} \quad (1)$$

위에서 y_{it} 는 가구, 또는 개인 i 의 t 기 소득이며, y_{it}^P 는 그 가운데 항상적 소득 요인(permanent income component), ϵ_{it} 는 일시적 요인(transitory income component)이다. 일시적 소득 요인은 항상적 소득 요인과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소득의 구성 요인 모형은 유경준·김대일(2003)과 Bourguignon, Goh, Kim(2005)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다 간단한 설정을 사용하기로 한다. 소득의 항상적 요인(y_{it}^P)에 시기(t)가 포함된 것은 항상적 요인도 변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감안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log y_{it}^P$ 는 $\log y_{it}^P = \log y_{it-1}^P + u_{it}$ 라는 진화(evolution) 모형으로 설정된다. 여기서 u_{it} 는 $\log y_{it-1}^P$ 와 독립적인 우보(random walk) 변수로 설정된다.

항상소득가설하에서는 소비와 소득의 관계에 있어서 소비는 항상적 요인의 함수라고 설정된다. 이는 아래 식 (2)와 같다.

$$\log c_{it} = \log y_{it}^P + \eta_{it} \quad (2)$$

c_{it} 는 가구 또는 개인 i 의 t 기 소비이며, η_{it} 는 잔차항으로서 예측하지 못한 요인에 의한 소비지출, 예를 들어 경조사비 등을 반영하는 소비지출이며, η_{it} 는 $\log y_{it}^P$ 와 독립적이다. 가장 제약적인 항상소득가설하에서는 $\eta_{it} = 0$ 이다.

일반적으로 소비함수를 추정할 때, 케인즈 모형(Keyensian model)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비를 당기의 소득의 함수로 추정하며, 그 추정계수를 한계소비 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으로 정의한다.

$$\log c_{it} = \alpha + \beta \log y_{it} + \mu_{it} \quad (3)$$

그런데 항상소득가설하에서 위의 추정계수($\hat{\beta}$)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E(\hat{\beta}) = \frac{Cov(\log c_{it}, \log y_{it})}{Var(\log y_{it})} = \frac{Cov(\log y_{it}^P, \log y_{it}^P) + Cov(\mu_{it}, \epsilon_{it})}{Var(\log y_{it}^P) + Var(\epsilon_{it})} \quad (4)$$

반면 항상소득가설하에서는 소비와 소득을 연계시킬 때, 오히려 다음과 같이 소득을 소비의 함수로 추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log y_{it} = \tau + \gamma \log c_{it} + \xi_{it} \quad (5)$$

이 경우 추정계수($\hat{\gamma}$)의 기댓값은 아래와 같다.

$$E(\hat{\gamma}) = \frac{Cov(\log c_{it}, \log y_{it})}{Var(\log c_{it})} = \frac{Cov(\log y_{it}^P, \log y_{it}^P) + Cov(\epsilon_{it}, \mu_{it})}{Var(\log y_{it}^P) + Var(\eta_{it})} \quad (6)$$

일시적 소득 요인과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독립적이라면 $Cov(\mu_{it}, \epsilon_{it}) = 0$ 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식 (4)와 식 (6)을 비교할 때, 두 추정계수 모두, $Var(\epsilon_{it})$ 와 $Var(\eta_{it})$ 의 크기에 따라 1에서 0 방향으로 편의(bias)를 갖게 된다. 제약적인 항상소득가설에서는 $\eta_{it} = 0$ 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E(\hat{\gamma}) = 1$ 이 성립되지만, 소득에 일시적 요인이 존재하는 이상 $E(\hat{\beta}) < 1$ 이다.

<표 5>는 도시가계조사내 임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식 (3)과 식 (5)를 추정한 결과이다. 우선 가구소득과 소비를 사용하여, 소비를 소득의 함수로 추정(식 (3))할 경우 2001~2004년 기간에 걸쳐 $\hat{\beta} = .675$ 로 추정되었고, 표준 오차는 .004로서 1% 유의수준에서 1보다 작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도별로 추정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hat{\beta}$ 는 .67~.72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역시 1에 비해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소득을 소비의 함수로 추정(식 (5))할 경우 2001~2004년 자료를 합하여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hat{\gamma} = .918$ 로서 훨씬 1에 근접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었다. 연도별로 추정할 경우 $\hat{\gamma}$ 는 .86~.92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어, 서로 대응되는 $\hat{\beta}$ 에 비해 훨씬 1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hat{\gamma}$ 의 표준 오차들도 상당히 작은 값을 보이고 있어 통계적으로는 1보다 작다는 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

〈표 5〉 소득과 소비의 관계

(1) 가구소득/소비를 사용

	로그 소득			로그 소득	
	pooled	연도별		pooled	연도별
로그 소비	.675 (.004)		로그 소비	.918 (.005)	
로그 소비(2001)		.706 (.009)	로그 소비(2001)		.871 (.011)
로그 소비(2002)		.717 (.009)	로그 소비(2002)		.862 (.010)
로그 소비(2003)		.670 (.007)	로그 소비(2003)		.924 (.009)
로그 소비(2004)		.682 (.007)	로그 소비(2004)		.910 (.010)
연도 더미	포함	포함	연도 더미	포함	포함
관측치 수	19,875	19,875	관측치 수	19,875	19,875
Adjusted-R ²	.620	.620	Adjusted-R ²	.620	.620

주: () 안의 숫자는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를 의미.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2001~2004)』.

(2) 표준화된 1인당 소득/소비를 사용

	로그 소득			로그 소득	
	pooled	연도별		pooled	연도별
로그 소비	.641 (.002)		로그 소비	.913 (.003)	
로그 소비(2001)		.670 (.005)	로그 소비(2001)		.875 (.006)
로그 소비(2002)		.687 (.005)	로그 소비(2002)		.854 (.006)
로그 소비(2003)		.647 (.004)	로그 소비(2003)		.920 (.005)
로그 소비(2004)		.646 (.004)	로그 소비(2004)		.904 (.006)
연도 더미	포함	포함	연도 더미	포함	포함
관측치 수	68,440	68,440	관측치 수	68,440	68,440
Adjusted-R ²	.586	.586	Adjusted-R ²	.586	.586

주: () 안의 숫자는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를 의미.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2001~2004)』.

한편 <표 5-(2)>에서는 가구 소득과 가구 소비 대신 가구원 1인당 표준화된 소득과 소비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가구 소득과 소비 대신 1인당 소득과 소비를 사용하는 것은 가구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소득을 얻는 가구원 수도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구 수준에서의 소득과 소비의 상관관계에서 가구원 수에 의해 유발되는 상관관계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1인당 소득과 소비를 사용할 경우, 각 가구의 관측치를 가구원 수만큼 복제하여 개인별 자료로 전환하였고, 개인별 가중치는 가구 가중치를 가구원 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된 <표 5-(2)>에 나타난 결과는 가구수

준의 소득과 소비를 사용한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즉 소비함수의 추정계수보다 소득을 소비의 함수로 추정한 추정계수가 훨씬 1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가구 및 개인의 소득과 소비 양상에서 항상소득가설이 상당히 설득력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추정 결과는 평균적인 연계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이러한 관계가 소득과 소비의 분포 전반에 걸친 결과인지, 아니면 평균적인 소득과 소비에 국한된 결과인지는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해 소득과 소비의 분포 자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역시 여기에서도 소득과 소비에 대한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임금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각 가구를 가구소득 순으로 배열하여 소득 분포를 100개의 백분위(percentile)로 구분한다. 그리고 각 백분위 내에서 가구소비의 분포를 구하여 다음과 같은 값들을 추정한다.

$$\begin{aligned} z_{yp} &= E(\log y_i | i \in p) \\ z_{qp}^q &= E(\log c_i | i \in p \text{ and } i \in q) \end{aligned} \quad (7)$$

위에서 $p (= 1, 2, \dots, 100)$ 는 소득에 따라 정의된 백분위로서 $p=1$ 은 소득이 가장 낮은 1%의 가구집단을, $p=100$ 은 소득이 가장 높은 1%의 가구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z_{yp} 는 이와 같이 정의된 p 백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 로그 소득이다. 한편 q 는 소득에 의하여 정의된 각 p 백분위 집단 내의 소비 분포에서의 백분위를 나타낸다. 즉 $p=1$ 과 $q=100$ 이라면, 소득이 가장 낮은 1%의 가구 집단 내에서 소비의 분포를 구하여 이를 백분위로 구분하였을 경우 소비가 가장 높은 1%에 속한 가구집단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q 가 전체 가구의 소비 분포에서 정의된 백분위가 아니라, 각 소득 백분위 집단 내의 소비 분포에서 정의된 백분위라는 점이다. 따라서 z_{qp}^q 는 소득이 p 백분위에 속한 가구 가운데, 그 집단 내 소비 분포상 q 백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 소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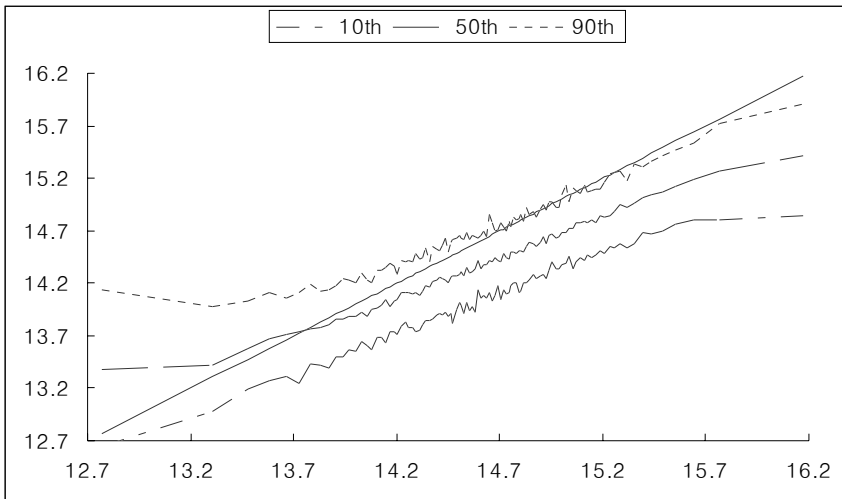
[그림 1-(1)]에서는 소득과 소비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각 p 백분위별로 정의된 z_{yp} (평균 로그 소득)에 대해 $q=10, 50, 90$ 에서 평가된 z_{qp}^q (분위별 평균 로그 소비)를 대비시키고 있다.⁸⁾ 그림에서 실선은 45도 선으로서 이 선 위에 존재하는 점은 소비와 소득이

8) 유경준·김대일(2003)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2001)에 수록된 2000년도 소득과 소비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결과가 2000년도 이후에도 계속 관측된다는 점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그림 1]에 제시된 소득과 소비의 관계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우선 중위 소비값인 z_{cp}^{50} 을 보면 대체로 그 기울기가 1보다 확연하게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소득 백분위가 올라가면서 평균 로그 소득이 증가하지만, 각 소득 백분위 집단내 중위 소비는 소득의 증가폭보다 작게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표 5>에서 보았던 추정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각 소득 백분위 내에서 소비가 높은 계층($q=90$)의 평균 소비(z_{cp}^{90})와 소비가 낮은 계층($q=10$)의 평균 소비(z_{cp}^{10})를 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에서 소비의 분포가 상당히 넓음을 알 수 있다.⁹⁾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중위 소비값(z_{cp}^{50})도 소득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z_{cp}^{90} 도 평균 소득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소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소득과 소비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득과 소비의 연계가 강하지 않다는 것은 소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소득에 일시적인 요인의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1] 가구 소득과 소비의 분포 비교(2001~2004)

(1) 소득수준별 소비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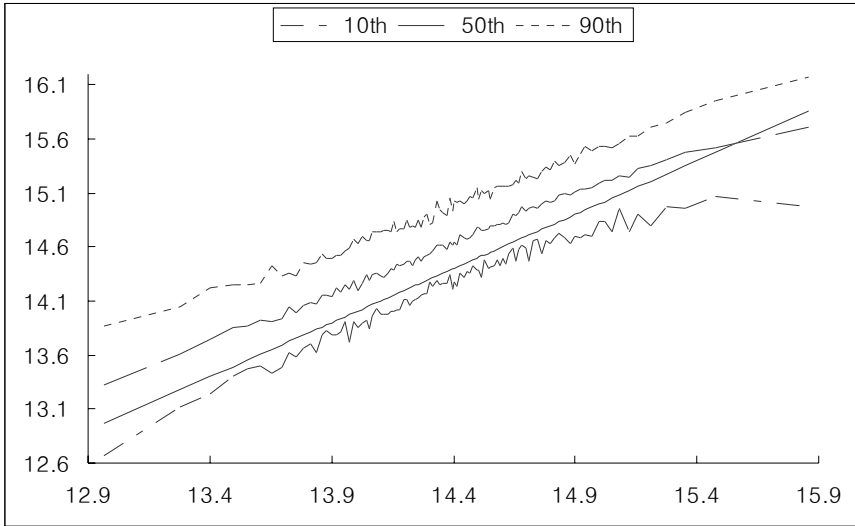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2001~2004)』.

는 상당히 안정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9) 소비 분포의 넓이는 소비가 높은 계층($q=90$)의 평균 소비(z_{cp}^{90})와 소비가 낮은 계층($q=10$)의 평균 소비(z_{cp}^{10})의 격차를 통해 알 수 있다.

(2) 소비수준별 소득의 분포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2001~2004)』.

[그림 1-(2)]에서는 소비와 소득의 역할을 바꾸어 [그림 1-(1)]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즉, 소비수준별로 가구를 배열하여 소비가 낮은 순서로 백분위(percentile)를 정하고, 각 소비 백분위 집단 내의 소득 분포를 표기하였다. 따라서 가로축은 소비 백분위별 평균 로그 소비를 의미하고, 세로축은 각 소비 백분위 내의 소득 분포상 각 분위에서의 소득 수준을 나타낸다. 그 결과 [그림 1-(2)]는 [그림1-(1)]에 비해 여러 가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각 소비 백분위 내 소득의 중위 값은 45도 선보다 위에 위치하지만, 대체로 45도 선과 평행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소비의 백분위를 따라 소비수준이 증가할 때, 소비 백분위 내 중위 소득도 유사한 증가폭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은 소비가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에서도 대체적으로 성립되고 있어, 소득이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던 [그림 1-(1)]의 결과와 대비된다. 이러한 결과는 <표 5>에서 소득을 소비의 함수로 추정할 때 그 추정계수가 1에 근접하여 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각 소비 백분위 내에서 소득의 분포는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각 소비 백분위 내에서 소득 분포상 90 백분위와 10 백분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격차가 거의 모든 소비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2)]에서도 소비가 아주 높은 계층과 아주 낮은 계층에서는 소득 분포가 다소 확대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지만, [그림 1-(2)]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다. <부록>에서는 가구 소득 대신 표준화된 가구원 1인당 소득과 소비를 이용하여 [그림 1]과 같은 분석을 한 결과인데, [그림 1]의 결과와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소비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결과가 가구원 수의 분포에 영향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구 소득과 소비의 관계에 있어서 가구 소비를 소득의 함수로 정의하고 이 함수로부터 괴리된 소비 값을 잔차로 상징하는 것(식 (3))보다는 그 반대로 소득을 소비의 함수로 정의하고 그 함수로부터 괴리된 소득값을 잔차로 상징(식 (5))하는 것이 더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기술적으로 볼 때 [그림 1]과 [그림 2]는 식 (5)보다는 식 (3)에서의 잔차항에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이 상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에 있어서도 식 (5)의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경제학적으로 볼 때 가구들의 소득과 소비 패턴이 항상소득가설에 매우 근접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식 (5)와 같은 설정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소비에 있어서도 예측하지 못한 소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약적인 형태의 항상소득가설이 소비와 소득의 양상을 모두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양상에 있어서 항상소득가설의 적합성을 쉽게 기각할 수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3. 불평등도와 빈곤

항상소득가설이 적용되고 있다면, 소득을 이용한 불평등도 분석, 빈곤 분석 등은 그 경제 내 구성원의 효용(welfare) 분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구성원의 효용은 소비에 의해 보다 직접적으로 결정되는데, 소득과 소비가 일대일 대응관계에 있다면 소득의 불평등도가 효용의 불평등도로 직접 연계될 수 있으나, 소득에 변동성이 높아도 자본시장에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소비 균등화가 가능하다면, 소득 불평등도는 효용 불평등도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경준·김대일(2003), Bourguignon, Goh and Kim(2005) 및 Kim(2006)에서 보이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일시적 소득 요인(transitory income component)의 변동성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도의 시계열 분석을 통한 결과가 실질적인 효용 불평등도의 변화를 잘못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최근 소득 분포를 이용하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는데, 소

득 분포의 양극화가 실제 경제 구성원의 복지 불평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선불리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¹⁰⁾

본 절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과 소비의 불평등도 및 각 변수에 기초한 빈곤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표 6>에서는 소득과 소비에 각각 기초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보이고 있는데, 임금 근로자의 경우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대체로 .290을 넘는 수준이지만, 가구 소비를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0.270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구 소득에 비해 가구 소비는 훨씬 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소득에는 일시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소득과 소비의 지니계수가 절대적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 이외에, 시계열 변화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1년과 2002년 사이에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감소한 반면, 소비를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

<표 6> 소득과 소비를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의 비교

	가구당 소득/소비				
	임금 근로자 가구		자영업	무직자	전체 가구
	소득	소비	소비	소비	소비
2001	.301	.274	.285	.332	.289
2002	.300	.275	.302	.347	.299
2003	.298	.266	.267	.361	.284
2004	.294	.271	.275	.364	.288
	표준화된 가구원 1인당 소득/소비				
	임금 근로자 가구		자영업	무직자	전체 가구
	소득	소비	소비	소비	소비
2001	.301	.268	.282	.310	.280
2002	.296	.267	.305	.336	.292
2003	.294	.255	.264	.347	.272
2004	.290	.262	.269	.328	.262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2001~2004)』.

10) 신동균·전병유(2005) 등에서는 소득 분포에 있어서 지니계수에 비해 양극화 지수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각 지수의 증가 속도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소득 양극화가 진행되었다고 하여도, 소비 분포의 변화가 이러한 소득의 양극화를 실제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소비의 양극화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는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3년과 2004년 기간에도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298에서 .294로 감소한 반면, 소비를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오히려 .266에서 .271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원 규모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표준화된 가구원 1인당 소득과 소비를 사용할 경우에도 결과는 유사하다. 소비 기준의 지니계수가 낮을 뿐 아니라, 2003년과 2004년 기간 동안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294에서 .290으로 하락한 반면, 소비 기준의 지니계수는 .255에서 .262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적으로 임금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 그리고 무직자 가구의 소비 불평등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무직자 가구의 소비 지니계수가 가장 높고,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가구 순으로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다만 자영업자와 임금 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 역시 항상소득가설과 일관성을 갖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대체로 임금 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의 불평등도가 높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불평등도는 양 집단에서 유사하다는 것은 자영업자의 높은 소득 불평등도가 일시적 소득 요인의 변동성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¹¹⁾ 즉 비록 소득의 변동성은 자영업자에게서 더 크지만, 소비 균등화를 통해 소비의 불평등도는 별 차이 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표 7>에서는 소득과 소비에 기준하여 추정된 절대 빈곤율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빈곤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 또는 소비수준을 지닌 가구의 비중으로 정의하였다.¹²⁾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는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소비 또는 소득의 분포 변화가 없어도 최저생계비의 변화로 인해 빈곤율은 변화할 수 있다.¹³⁾ 따라서 여기서는 빈곤율의 시계열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소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의 격차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11)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임금 근로자 가구 이외에는 소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본 자료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불평등도가 더 높은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유경준·김대일(2003)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불평등도가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2) 일례로 2000년도에는 4인 가구 기준 928,398원이 최저생계비이며, 2004년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205,535원이 최저생계비이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4인 가구 가운데 소득이 1,205,535원에 못 미치는 가구를 소득 기준의 절대빈곤 가구, 소비(가구지출)가 1,205,535원에 못 미치는 가구를 소비 기준의 절대빈곤 가구로 정의하였다.

13) 4인 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최저생계비는 매년 명목으로 3% 내외의 인상을 보여왔다.

〈표 7〉 절대 빈곤율의 비교

(단위 : %)

가구	임금 근로자 가구		자영업	무직자	전체 가구
	소득	소비	소비	소비	소비
2001	2.5	3.5	3.7	15.9	5.8
2002	1.9	3.9	3.6	18.2	6.2
2003	3.7	4.0	3.7	17.6	6.2
2004	3.6	3.3	2.8	15.3	5.1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2001~2004)』.

임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소비의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 대체로 소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구들 가운데 일부 소비가 소득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미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소득이 소비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 오히려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보다 낮게 추정되고 있다. 2004년도에도 평균 소득이 평균 소비에 비해 높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소비의 분포가 소득의 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좁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정확하게는 소비 분포의 좌측 꼬리(left-tail)가 소득 분포의 좌측 꼬리에 비해 더 얇기(thin)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서 <표 1>에서 소득의 50/10 백분위 격차(50-10th percentile difference)가 소비의 50/10 백분위 격차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자영업자와 임금 근로자 가구를 비교하면 소비에서의 빈곤율이 대체로 자영업자에게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유경준·김대일(2003)에서 제시된 결과와 동일하다.¹⁴⁾ 유경준·김대일(2003)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추출한 2000년도 소득과 소비를 분석하면서,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율이 임금 근로자 가구에 비해 높지만, 소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율이 더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과 소비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 가구에 비해 높은 소비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 자영업자 가구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 <부록>에서는 가구 유형별 소비를 비교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

14) 분석에 사용된 2001~2004년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임금 근로자 가구의 비중은 57.2%, 자영업 29.1%, 무직자 13.7%이다.

수준은 임금 근로자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소비의 평균을 넘어 그 분포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 이유는 2001년의 경우 평균 로그 실질 소비는 자영업자 가구에서 .070 로그 포인트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은 오히려 자영업자에게서 0.2%포인트 높기 때문이다. 즉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 분포가 더 굽은 좌측 꼬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2004년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가구와 임금 근로자 가구 간에 평균 로그 실질 소비의 격차는 .041로 오히려 2001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빈곤율은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3.7%에서 2.8%로 .9%포인트 하락한 반면, 임금 근로자 가구에서는 3.5%에서 3.3%로 .2%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치고 있다. 즉 평균적으로는 임금 근로자 가구의 소비가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소비 분포의 좌측 꼬리는 오히려 자영업자 가구에서 더 빠르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8>에서는 상대 빈곤율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상대 빈곤율은 소득 및 소비 분포의 중위 값(median)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으로 정의되었는데, 이는 OECD의 기준을 따른 결과이다. 표의 결과에 의하면 임금 근로자 가구에 있어서 상대 빈곤율은 소비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소비를 기준으로 한 경우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는 유경준·김대일(2003)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득의 일시적 변동성이 증가와 부합되는 결과이다. 한편 소비를 기준으로 측정된 상대 빈곤율도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현상도 소득의 항상적 요인의 변동성 증가, 즉 앞서 소득의 항상적 요인(y_{it}^p)의 구성에서 정의되었던 u_{it} 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연구 결과와 부합된다(유경준·김대일 2003).

가구 유형별로 소비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을 비교하면 아무래도 소득과 소비

<표 8> 상대 빈곤율의 비교

(단위 : %)

	임금 근로자 가구		자영업	무직자	전체 가구
	소득	소비	소비	소비	소비
2001	9.5	6.8	4.2	25.1	9.3
2002	10.4	6.9	5.2	30.5	10.4
2003	11.6	7.0	5.9	29.8	10.6
2004	12.3	7.1	5.7	30.7	10.5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2001~2004)』.

가 모두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무직자 가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영업자 가구와 임금 근로자 가구를 비교하면 자영업자 가구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낮게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평균 소비가 더 높다는 사실 이외에도 자영업자 가구의 소비 분포가 상대적으로 더 좁다는 것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¹⁵⁾

III.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를 통해 가구의 소득과 소비 분포를 비교하고, 항상소득가설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임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의 일시적 변동성은 가구 소비에 특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 행태에 있어서 항상소득가설이 상당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가설과 일관성을 갖는 결과로 판단된다.

항상소득가설에서와 같이 소득의 변동성이 소비의 변동성으로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면,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불평등도 지표(inequality indices) 및 빈곤 지표(poverty indices)만으로 경제 구성원의 복지 분포(welfare distribution)를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유경준·김대일(2003)과 같은 연구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2000년대 초반 빈곤율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경제 구성원의 복지와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소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평균 소비가 평균 소득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7% 수준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낮게 추정되고 있다. 이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도보다 소비를 기준으로 한 불평등도가 훨씬 양호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임금 근로자 가구에 국한된 비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 전체의 양상으로 일반화시켜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불평등도와 빈곤의

15) 자영업자 가구와 임금 근로자 가구의 소비 분포에 대해서는 <부록>의 표를 참조.

수준 및 변화에 대한 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불평등도에 대한 연구들이 소득에 초점을 맞추어 온 이유 가운데 자료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이 많이 부각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도시가계조사 등에서 소비와 소득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비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현재까지 미진하였던 소비에 대한 분석이 보다 확대될 필요성이 높고, 또한 자료 구축 단계에서도 통계 당국이 소비에 대한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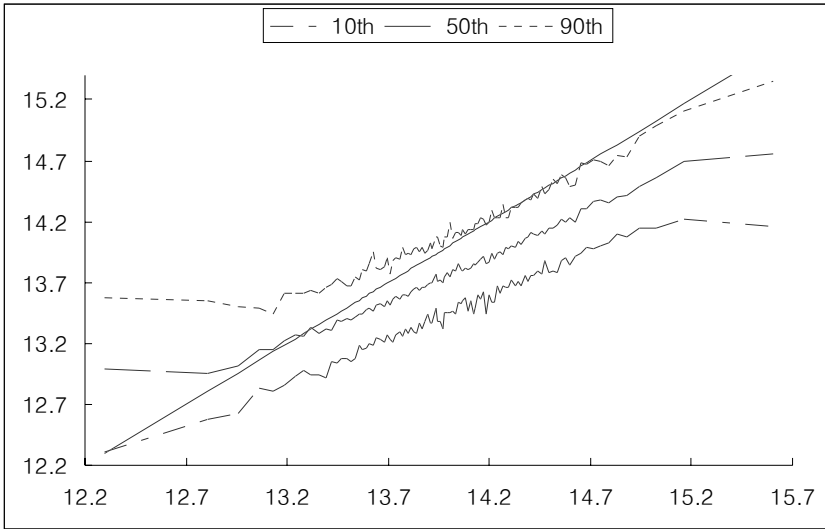
- 신동균·전병유. 『소득 분포의 양극화 추이』. 『노동경제논집』 28권 3호(2005. 12) : 77-109.
- 여유진. 『한국에서의 소비지출 불평등에 관한 연구 : 집합적 소비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 유경준·김대일.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3.
- Bourguignon, Francois, Chor-ching Goh, and Dae Il Kim. "Estimating Individual Vulnerability to Poverty with Pseudo-Panel Data." *Mobility and Inequality*. edited by Stephen L. Morgan, David B. Grusky, and Gary S. Fields, pp. 349-369.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Cutler, David M., and Lawrence F. Katz. "Rising Inequality?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Consumption in the 1980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s #3964*, 1992.
- Friedman, Milton.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Kim, Dae Il (2006). "Earnings Variability and Capital Market Opening." 『노동경제논집』 29권 1호 (2006. 4): 1-39.

Krueger, Dirk, and Fabrizio Perri. "Does Income Inequality Lead to Consumption Inequality? Evidence and Theory." *Review of Economic Studie* 73 (1) (2002) : 163-193.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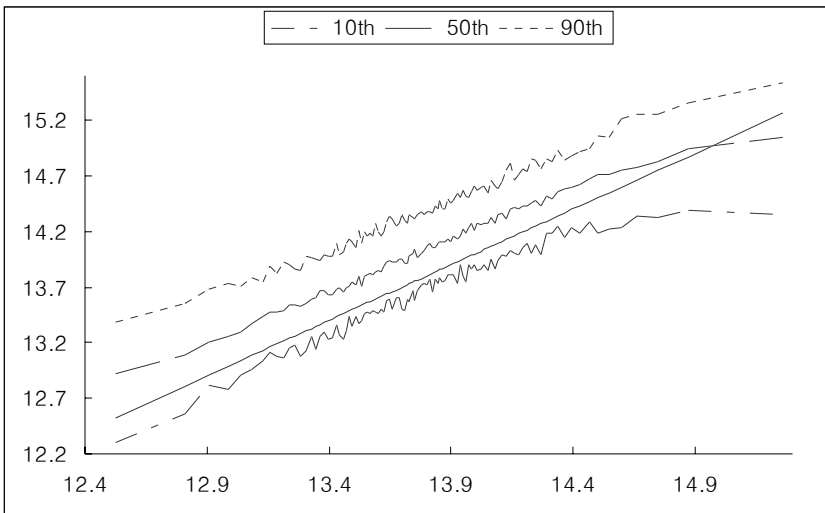
[도표 A-1] 표준화된 1인당 소득과 소비의 분포(2001~2004)

(1) 소득수준별 소비의 분포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2001~2004)』.

(2) 소비수준별 소득의 분포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2001~2004)』.

〈부표 A-1〉 가구 유형별 소비 분포의 비교

(1) 가구 실질 소비

가구 소득	로그 실질 소비 평균				로그 실질 소비 표준편차			
	전체	임금 근로자	자영업	무직자	전체	임금 근로자	자영업	무직자
2001	14.312	14.352	14.422	14.020	.541	.499	.493	.624
2002	14.322	14.368	14.442	13.971	.558	.506	.519	.634
2003	14.319	14.377	14.413	13.974	.553	.504	.497	.653
2004	14.353	14.408	14.449	13.997	.557	.511	.501	.656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2001~2004)」.

(2) 표준화된 가구원 1인당 실질 소비

1인당 표준화 소비	로그 실질 소비 평균				로그 실질 소비 표준편차			
	전체	임금 근로자	자영업	무직자	전체	임금 근로자	자영업	무직자
2001	13.722	13.759	13.792	13.500	.507	.470	.476	.591
2002	13.740	13.782	13.821	13.469	.524	.478	.505	.606
2003	13.731	13.781	13.793	13.463	.512	.472	.472	.610
2004	13.769	13.818	13.831	13.491	.514	.477	.476	.605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2001~2004)」.

abstract

Comparison of Income and Consumption Inequalities

Dae-II Kim

This paper compares income and consumption for their relative effectiveness in measuring inequality. Although income inequality has received more attention in the literature,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links consumption to welfare more directly than income. To the extent economic agents smooth their consumptions, consumption inequality is a better indicator for an economy's welfare inequality, and it is especially so when income volatility is high.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paper indicates that the income and consumption patterns among the Korean wage/salary worker households are quite consistent with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Further, it is found that consumption inequality tends to be lower than income inequality, and more importantly, that the two inequalities do not always vary in the same direction. These results call for stronger emphasis on consumption inequality in inequality literature.

Key Words: Inequality, Permanent Income Hypothesis, Income, Consumption